민주 '검수완박' 속도전…"4월 처리 못하면 기회 없어"

검찰 등 저항 속 강력 드라이브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야당 설득·여론 충분히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4월 국회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8일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에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수위 지역 균형발전특위 5차회의 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광주 광산을 구의원 수 1명 증가

3개 선거구 8명→9명으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을 기초의원(구의원)이 1명 늘어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선거구·의원 수 조정 안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지역구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중 호남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을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 결과 광산을 3곳의 선거구(3~5선거구) 구의원 수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3선거구는 기존 하남동·임곡동·비아동·첨단1동·첨단2동에서 첨단1동·첨단2동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의원 수는 1명이 줄어 4명에서 3명이 됐다.

4선거구는 신가동·신창동에 비아동이 추가돼 구의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5선거구는 수완동에 하남동·임곡동이 추가돼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일당 정치체제 벗어나야 광주 발전·변화 있을 것"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만큼 광주도 여당과 손을 잡아야 하고, 여당 인사가 시장이 되어야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도 이뤄지고 광주 발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광주 미래 자동차 산업,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일색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광주도 정치지형이 바뀔 때가 된 거 같고, 시민들이 느끼신 거 같다"면서 "시장이 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추진해서 4년 뒤 광주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7년 간 일당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광주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면서 "저는 윤 당선인의 측근이기 전에 광주시민으로서 광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어 "윤 당선인은 뼛속까지 광주 사랑이 지극한 사람으로, 윤 당선인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잘 알리겠다"면서 "윤 당선인은 '호남이 전국적으로 홀대를 받는 건 사실이다.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5·18을 비롯한 호남의 한을 풀겠다. 그것은 호남을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이다'고 늘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과정에서 호남 인사 배제에 대해 "권유와 추천, 감수했지만 일부는 사정상 되지 못했고 일부는 고사했다"면서 "호남 홀대는 단적으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호남출신 고위공직자 인사 부분에 있어 인센티브가 적용됐으면 됐지 차별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천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적임자라 생각하니 당선인뿐만 아니라 당도 추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를 당선인이 내정한 게 아니고 당이 추천하고 공관위가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예비후보는 1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출마 회견을 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연금개혁,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지, 소득대체율이 낮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기초연금부터 여러 레이어(층)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